

비리·성폭력 의혹 광주시의원 의원직 박탈되나

# 시민 여론 압박 속 칼자루는 동료들 손에

### 오늘 윤리특위 열어 징계 절차 착수 구속된 비리 연루 의원 제명 확실시 성폭력 의혹 의원엔 '제명' '신중' 팽팽

민주당이 최근 자당 소속 광주시의원 2명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한 가운데, 28일 개최하는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 정치권의 관심은 비리혐의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월출 의원 등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제명'이 광주시의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돼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느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칼자루는 이들의 동료인 시의원들 손에 쥐어져 있다. 두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 의원(19명) 3분의 2 이상(14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광주시의원들 사

이에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월출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일보에 지난 25~27일 당사자인 2명을 제외한 17명의 시의원에게 전화해 걸어 입장을 확인했다. 이 결과, 15명의 의원이 김남일 의원에 대해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내놓으면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을 담이 제명한 것은 의원직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존중해야 한다", "이미 구속 수감된 마당에 제명 외의 징계는 의미가 없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등을 제명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2명의 의원은 "부담스럽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김월출 의원의 징계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차가 컸다. 7명은 "시의회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추락한 의원 위상을 회복, 시민 대표 기구로서 새롭게 거듭나려면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밀릴 수만은 없다"며 제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의원도 7명에 달했다.

2명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다. 윤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1명은 "구체적

으로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88조)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종류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도사랑’ 글 남기세요  
광주 시민들이 27일 광주지하철 상무역에 설치된 ‘독도는 우리 땅! 자유발언대’에 독도 수호의지와 독도 사랑을 담은 글을 남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국 대표단 출발 후에 한국에 쇠고기 협상 요청”

민주 김상희 의원 “졸속·부실협상 근거”

지난 4월11일 국내에서 이뤄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제안 전에 미측 대표단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공식 협상 요청조차도 협상 하루 전에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외교통상부 문서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웬디 커틀러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 대표단이 4월9일(미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10일 새벽) 서울로 향했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통부에 보냈다.

같은 날인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의 공식적 협상 제안사실을 공문으로 접수한 뒤 역시 같은 날 미국 측에 협상 수용 방침을 통보했고, 외통부에도 낮 12시30분 공문을 보내 협상 개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농림부는 이날 곧바로 관련 훈령을 만들었으나 시간상 촉박함 등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전문가 토론회 등

을 거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 정부에 접수된 쇠고기 협상 관련 공문은 4월 10일분이 최초였다”며 “미국 측의 공식 협상요청과 그에 대한 우리 측의 수락이 있기 전에 협상단이 이미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측의 공식 수락이 있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출발 사실을 통보하고 협상 하루 전에야 공식 요청을 한 것은 외교관례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협상 자체가 사전에 워싱턴에 마추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쫓기듯 서둘러 이를 추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대국가로부터 협상 제안이 오면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치는 게 통상적 관례”라며 “대통령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아무런 대응 전략 없이 끝러디언 졸속, 부실협상의 단적인 근거”라며 “정상회담 선물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수출위생증명서 ‘30개월 미만’ 없으면 반송

■재상록 美쇠고기 감시 어떻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LA갈비’가 28일 국내에 반입됨에 따라 다각적인 체계를 동원해 감시 체제 강화에 나선다.

검역당국은 우선 지난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평가(QSA) 프로 그래’를 통해 생산됐다는 표시가 없는 수입 건은 모두 돌려보낼 방침이다.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미만’ 명기돼야 통과= 28일 LA갈비가 공 항에 도착, 적하(화물) 목록이 제출되면 공항에 배치된 검역관은 곧바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역학조사’, 즉 수출위생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검사가 이뤄진다.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는 표기가 없거나 훼손됐을 경우 해당 수입 건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된다.

한국 수출이 승인된 미국내 30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전에 도축된 쇠고기 등도 모두 불합격 대상이다.

수입업자는 수도권 유통을 염두에 두고 용인·이천 등의 경기도 소재 검역 창고에 짐을 풀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검역은 수입업자의 공식 검역 신청이 접수된 뒤부터 시작된다.

◇SRM 발견시 전량 반송, 뇌·눈·척수는 박스만= 검역 당국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앞으로 SRM인 편도·회장원위부와 각각 인접한 혀와 내장이 수입되면 검역당국은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골라 모두 녹인 뒤 현미경 조직 검사를 통한, SRM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 국회 4대특위 쟁점과 전망

## “오늘까지 쇠고기 국조 증인 채택” 한목소리

지난 주부터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민생안정대책, 공기업대책 등 4대 특위가 가동됐지만 곳곳에서 암초가 나타나 비틀거리고 있다.

이번 주에도 4대특위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부터 경기악화로 인한 서민고통과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장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지난 주 내내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에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해 청문 일정 자체가 또다시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4일 청문회를 위해선 28일에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문서검증과 기관보고를 위해 특위위원들이 다음달 10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28일을 증인채택의 ‘D-데이’로 잡고 있다.

증인 채택 후 최대 쟁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로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결정은 참여정부가 하고 뒤처리는 이명박 정부가 했다’는 이른바 ‘설거지론’으로 야당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바 없

다며 맞서고 있다.

◇가축법 개정 특위=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물론 30개월령 미만도 모든 뼈와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인간)광우병 발생시 해당국가의 쇠고기(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향의 가축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와 사퇴 강요 논란이 최대 쟁점이다. 공기업 특위는 28일 금융기관 현안보고, 29일 감사원의 공기업 실태 보고를 각각 받는다. 이번 주에는 특히 공기업 임직원 낙하산 인

사문제와 사퇴 강요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생안정대책특위=28일 기획재정부, 2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은 국제경제 등 외부적 환경에 따른 경제악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고환율 정책의 실패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총체적인 경제 난맥상을 질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가해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